데스크시각

박 진 현

광주 비엔날레 열풍 이어가려면…

광주 시립미술관은 요즘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중외공원 벨트가 연일 1만여 명에 가까운 광주비엔날레 관람객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옛말에 '9~10월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날뛴다'고 하는데, 초대형 미술잔치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이웃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비엔날레 옆 미술관'이 썰렁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비엔날레 부대전시로 '미술오케스트라'가 열리긴 하나,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만큼 전시의 규모나 내용이 매력적이지 않다.

미술관과 단절된 비엔날레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다룬 '미술 오케스트라'의 경우 아마추어 기획자들이 꾸려낸 전시여서 시립미술관을 대표하는 비엔날레 기획전으로 부르기엔 2%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전시의 기획과 연출이 비엔날레 재단의 주도로 이뤄져 말만 시립미술관 기획전이지, 실상 미술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엔날레 기간 동안 '미술관의 꽃'이라고 하는 학예사들의 주업무는 가뭄에 콩 나듯 전시장을 찾는 손님 접대가 전부일 정도다. 비엔날레와 더불어 문화수도 광주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축인 시립미술관의 현주소다.

6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2006 광주비엔날레가 지난 8일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다할 돌발변수 없이 12년간의 노하우를 살려 무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는 평이다. 개막 이후 하루 평균 9천295명이 다녀가 10일 현재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형상의 성과일 뿐 비엔날레 속내를 들여다 보면 완주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이 산재해 있다. 고질적인 정체성 논란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다.

우선 광주의 핵심 미술 인프라인 시립미술관과의 단절은 이번 대회의 대표적인 실책 가운데 하나다. 비엔날레 개최지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들 사이의 인적·노하우 교류는 거의 없다. 방만한 비엔날레 재단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미술관의 전시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비엔날레의 얼굴'이라고 하는 예술 총감독의 선임방식에도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처럼 후보자를 추천받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공모방식으론 책임감 있고 중량감 있는 예술감독을 뽑는 데 한계가 있다. 역량 있는 전시기획자가 설령 비엔날레 감독에 마음이 있더라도 낙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단이사진과 미술계가 추천하는 현행방식은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후보 면면이 다양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유명 비엔날레들이 공모보다 영입을 통해 예술감독을 뽑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사진을 명망가 중심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제적인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회가 차기 비엔날레의 전시방향을 제시하고 이 컨셉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영입해 광주만의 색깔을 살려나가야 한다. 매번 외지 출신의 전시기획자들이 실험적인 컨셉을 내세워 마치 순번을 정한 듯 돌아가면서 예술감독을 맡는 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확립은 요원하다.

조직정비 등 환골탈태해야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광주비엔날레는 책임지는 사람, 말하자면 주인 없는 행사다. 성공했건 실패했건 누구 하나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없다. 매번 사후 평가회가 있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요식행사일뿐 구속력이 없다. 또 지금처럼 대회가 끝난 후 이사장, 예술총감독, 이사진 등이 동시에 임기만료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론 발전적인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다.

이제부터라도 역대 이사장, 예술감독, 미술계 인사 등 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은 인적자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think tank)를 구성, 일류 비엔날레로 거듭나는 청사진을 짜야한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고만고만한 비엔날레로 전락한다"는 미술계의 우려는 엄포가 아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결승테이프를 끊고 싶은가?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역주하면 된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사설

북, 추가 핵실험 등 도발행위 더 이상 안된다

북한의 핵 실험 강행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까지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사태가 닥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핵실험이라는 어리석은 도박으로 한반도에 위기를 몰고 온 만큼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북측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측이 대북 제재로 궁지에 몰릴 경우 추가 핵실험과 같은 또 다른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만약 추가 핵실험이나 핵탄두의 미사일 장착 행위와 같은 도발행동을 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북측은 또 다른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강도만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한 고립심화는 북한 체제의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핵 문제의 해결 수단을 선택할 때 한반도 평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일부 단체나 시민의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논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내부혼란만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 현명하게 대처하는 냉정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도 내부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목 끈 광주 전교조 분회장의 자성의 글

광주의 한 초등학교 전교조 분회장인 박병진 교사가 얼마 전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자성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3보1배하다 3보 후퇴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조회수가 1천건을 넘는 등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글은 곧 삭제됐지만 전교조가 처한 현실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교사의 글은 일선 학교의 금품상납 관행 등 교육비리 척결을 둘러싼 전교조의 '몰아붙이기'식 활동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광주 교육계가 끊임없는 비리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마당에서 전교조가 금품상납 실태를 고발한다고 해서 국민이 전교조, 아니 교사들을 바로 믿고 신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 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더불어 우리나라 양대 교원노조다.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고, 소속 교사가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개혁집단의 상징은 더 이상 아니다. 국민들은 지나친 이익집단화와 이념 및 정치투쟁에 실망해 있다. 지난번 전국 단위의 교육위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만 해도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박 교사는 전교조가 너무 강한 이미지로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국민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성과급 반납투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누구를 탓하는 투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반성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변해야 한다. 교사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박 교사의 글이 전교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 상 욱

동북공정에 철저한 대응을

도대체 중국, 일본은 우방국인가 적성국인가. 한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로 동해를 긴장시키더니 이제는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사회 과학원이 중국 동북 지방의 역사와 현황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 중 고조선사를 비롯한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에 관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자조선을 내세워 한반도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불성설이다. 태백산 즉 백두산에 내려온 환웅의 아들인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개국했다는 설이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중 모두 기자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백두산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성지인 것이다. 또 고구려를 그들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단정하며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니다. 조선족을 통합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한나라의 현도군을 축출한 것이다.

또 발해 건국의 주도세력이 말갈족이기 때문에 발해도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의 연합국이긴 해도 당시 선진문화를 이루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한 대조영이 세운 우리 민족 국가다.

근래 중국의 이러한 망언은 남북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조선족의 동요와 이탈을 막고 대외적으로 발언권을 높여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밀한 계산 아래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공정 연장선에서 백두산도 전체를 그들 땅이라고 우긴다. 그러면서 2005년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청했다. 관할권도 옌벤 조선족 자치구에서 지린성 직속으로 바꿨다. 2018년 동계올림픽도 백두산에서 유치하려 한다. 최근엔 백두산 관광에 투자한 한국 호텔 업주도 철수하라고 한다. 이것은 백두산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음을 세계에 알리려는 속셈이다.

이 얼마나 우리민족을 얕잡아 보는 행위인가.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 주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남북한이 합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 등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관은 결단코 금물이다. 정부와 '동북아 역사 재단'은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여 맞대응해야 한다. 영토든 역사든 남의 것을 뺏으려는 자는 도적이다. 자기 것을 뺏기는 자는 바보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결코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수필가·2005년5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독자마당

보행자 가로막는 가설물 왜 철거 못하나

공용 주차장에서 설치한 가설 건축물들이 인도를 차지하면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역 앞 도로의 경우 인도가 설치돼 있지만 공용 주차장에서 만들어놓은 가설 건축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차들이 주차된 경우에는 보행자들은 이면 도로 중앙으로 다녀야 하고, 차량이 지나갈때면 멈춰서거나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인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인데, 공용 주차장은 인도를 차지하는 시설물을 지어도 되는 것인가.

불법이라면 관할 구청인 북구청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아예 인근 상가에서도 평상 등 시설물을 도로에 내놓아 그나마 다니는 도로도 좁아지고 있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준·광주시 동구 계림동

지하철 이용시 최소한 에티켓 지켜야

최근 지하철을 탔다가 자리가 없어 서서 가고 있는데 뒤에 있던 남성이 신문을 크게 펼쳐 보면서 자꾸 내 머리를 건드렸다.

예민한 것도 있지만 불쾌했다. 나이가 많은 분 같아 참았는데 다섯 정거장이 지나도록 계속 내 머리를 신문으로 건드리는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문 좀 접어서 보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큰소리로 "너는 항상 택시만 타고 다니냐. 지하철은 혼자 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도 쏟아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하철을 혼자 타는 게 아니라는 것, 비좁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려면 해당 기사만 나오도록 접어 보는 것,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닌가.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서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나이 어린 학생에게 잔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진정한 민의 대변 위해 재보궐선거 투표 꼭 참여를

10·25 재보궐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전에 추석명절이 끼어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불법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7·26 재보궐선거 못지않게 저조하다.

정치인들의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행정적 차질을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새로운 인물을 좀 더 신중하게 골라보자는 기류는 보이지 않고 먹고 살기 바쁜데 정치에 신경이나 쓰겠냐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해 벌써부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재·보궐선거에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정치의 요체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은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지만 미미한 투표율로 당선된 정치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표성이 낮은 정치인은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연관된 주민들에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파당적인 성향의 사람들에 의해 행정의 방향이 좌우되어 특정계층의 이익만 대변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어느 후보자가 유권자와 지역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대안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자질있는 정치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진정으로 선거는 정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불똥이 자신에게로 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효경·광주시 북구 일곡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한글 민법

민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률 용어는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 취급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고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현행 민법의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9일 한글날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법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한다.

현재까지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법률 용어의 홍수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 흥미롭기까지 하다. 현행 민법의 '詐術(사술)로써 能力子(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했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完濟(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은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개정된다.

또 '表意子(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疏水管(소수관)'은 '송수관'으로, '溝渠(구거)'는 '도랑'으로, '朽廢(후폐)한 때에는'은 '너무 낡아서 쓸모 없게 되었을 때에는' 등으로 각각 바뀐다. 이외에도 '口授(구수 : 말로 전함)', '俱存(구존 : 모두 살아있음)' 등 고쳐야 할 난해한 표현이 셀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와 문장이 수두룩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해독하는데 애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민법에 이어 향후 상법, 형법 등 8대 주요 법률의 한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쉬운 법률 용어의 사용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부활됐다. 차제에 법률 용어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난해한 용어들의 한글화 작업도 병행됐으면 싶다.

/김우성 경제부장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